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1151
----------	------

제출연월일 : 2024. 6. 28.

제출자 : 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생활조정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생활조정수당 담당 공무원이 그를 대신하여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생계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을 “가구원(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와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으로 한다.

법률 제20280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4조의2 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을 것

제14조의3제1항 중 “부양의무자”를 각각 “가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양의무자가”를 “가구원이”로 한다.

제14조의4제1항 중 “부양의무자가”를 “가구원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양의무자”를 “가구원”으로 한다.

제19조 전단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을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없는”으로 한다.

법률 제20280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9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생계급여·의료급여”를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2(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① (생 략)	제14조의2(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할 경우 본인과 그 <u>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u> 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 ----- ----- <u>가구원(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와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u> 은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법률 제20280호	법률 제20280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4조의2(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① ~ ③ (생 략)	제14조의2(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를 대신하여 생활조정수당 지급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	④ ----- ----- ----- ----- ----- ----- -----.

우 제2항에 따른 서면 제출은 생략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를 받고 있을 것

2. 3. (생략)

⑤ (생략)

제14조의3(조사·질문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 수급자(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주거,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의 급여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을 것

2. 3.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의3(조사·질문 등) ① ---

----- 가구원

----- 가구원-----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을 각하하거나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④ (생략)

제14조의4(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

② (현행과 같음)

③ -----

----- 가구원이 -----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의4(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

----- 가
구원이 -----

-----.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생활조정수당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수급권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사항과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등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 ⑦ (생략)

제19조(양로지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자로서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세 이상의 여성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

-----.

② ----- 가구원-----

-----.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9조(양로지원) -----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

는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으로서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받는 자의 배우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법률 제20280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9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보험에 관한 자료,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없는 -

-----.

-----.

법률 제20280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9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
·교육급여 -----
-----.

-----.

1. ~ 12. (생략)	1. ~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의 결과

○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기존에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던 16명이 추가로 수급받게 됨에 따라 매년 0.6억원씩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

(단위: 백만원)

구 분 연 도		2025	2026	2026	2027	2028	합 계	연평균
지출	생활조정수당	57	57	57	57	57	285	57
	소 계(A)	57	57	57	57	57	285	57
수입								
	소 계(B)							
총 비용(A-B)		57	57	57	57	57	285	57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제14조의2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생활조정수당 지급 시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보훈대상자 가구의 소득·재산만을 심사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함에 따라, 기존에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으로 인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자가 추가됨에 따라 예산 소요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제14조의2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여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총 수혜인원은 약 1만 4천여명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23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온 까닭에 지원대상 중 1만 3천여명은 이미 24년 예산에 반영되어있으며 법률 개정에 따라 전면 폐지 시 예상되는 추가 수혜인원은 16명에 불과하여 16명에 대한 추계만 첨부함
- '24년 기준 생활조정수당 지급액을 기준으로 작성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생활조정수당은 가구원 수(4인 미만, 이상)와 생활수준(기준 중위소득 32%, 40%, 50%)에 따라 월 24.2만원에서 37만원까지 차등 지급되고 있으며 16명을 가구원 수별, 생활수준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음

구 분		2025년(예산)		
		단가(천원)	인원(명)	예산(천원)
3인 이하	50%이하	242	2	5,808
	40%이하	277	2	6,648
	32%이하	311	12	44,784
4인 이상	50%이하	300	0	0
	40%이하	336	0	0
	32%이하	370	0	0
소계			16	57,240

Ⅳ. 부대의견

- 수급예상자 중 사망인원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 '24년의 생활조정수당 지급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지급액 인상 시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주무관	사무관(서기관)	과장	실장·국장
손정환 주무관	조건희 사무관	김민영 보상정책과장	황의균 보상정책국장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조건희	010-9799-4864	jo3282@naver.com

* 주된 작성자의 연락처를 기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원조달방안

I. 항목별 재원조달방안

○ 향후 5년 간 재정소요 총 3억원을 전액 일반회계로 조달 예정

〈항목별 재원조달방안〉

(단위: 백만원)

구 분 연 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 조세수입·세외수입 또는 국채발행·차입						
○ 회계·기금 간 전입	57	57	57	57	57	285
○ 기존 예산·기금의 항목 간 조정						
○ 기타						
〈합 계〉	57	57	57	57	57	285

Ⅱ. 부문별 재원조달방안

○ 조세수입 등으로 조달된 일반회계로 집행될 예정으로,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을 수립하기는 어려움

〈부문별 재원조달방안〉

(단위: 백만원)

구 분 연 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input type="checkbox"/> 중앙정부						
○ 일반회계	57	57	57	57	57	285
○ ○○특별회계						
○ ○○기금						
<input type="checkbox"/> 지방자치단체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input type="checkbox"/> 기타						
○						
〈 합 계 〉	57	57	57	57	57	285

Ⅲ.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1. 중앙정부의 항목별 재원조달 방안

○ 조세수입 등으로 조달된 일반회계로 집행될 예정으로,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을 수립하기는 어려움

2. 지방자치단체의 항목별 재원조달 방안

○ 해당사항 없음

3. 기타 재원조달 방안

○ 해당사항 없음

Ⅳ. 부대의견

○ 해당사항 없음

Ⅴ. 협의사항

협의시점	협의기관	주요 협의내용 및 협의결과
'24.5	기획재정부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에 따라 '23년부터 예정된 사항으로 이견 없음

Ⅵ. 작성자

○ 성명

주무관	사무관(서기관)	과장	실장·국장
손정환 주무관	조건희 사무관	김민영 보상정책과장	황의균 보상정책국장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조건희	010-9799-4864	jo3282@naver.com